

국민권익위, 유엔총회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반부패 정책 방향 제시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반부패 특별회기 한국 대표 연설 -



(2021. 6. 4., 국민권익위)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위원장이 6.4.(금) 새벽(뉴욕 시간 6.3.(목) 오후) 제 32차 유엔총회 반부패 특별회기에서 화상으로 기조연설을 했다.

6.2.(수)~6.4.(금) 동안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이번 총회는 2005년 유엔반부패협약 발효 이후 부패예방과 척결 및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최초로 개최됐다.

< 유엔반부패협약 개요 >

- 공식 명칭 : 유엔 반부패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 유엔 산하기구인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가 동 협약 사무국 역할 수행
- 제정 목적 : 민주주의, 윤리적 가치 및 정의를 훼손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법의 지배를 위태롭게 하는 부패를 척결함으로써 부패로 인해 고통 받는 전 세계인의 삶의 질을 향상
- 당사국 현황 : 187개국
- 협약 서명 : 2003년 12월 10일, 협약 발효 : 2005년 12월 14일
- 국회비준동의 : 2008년 2월 29일

우리나라는 유엔반부패협약 국회비준동의(2008년 2월) 이후 협약 당사국으로서 국내외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1주기 협약 이행점검(2012년~2013년) 이후 2주기 협약 이행점검(2019년~2021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80여 개국의 정부대표와 부패방지기관장이 현장·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유엔반부패협약의 적극적이고 충실한 이행을 다짐하는 정치적 선언문*이 채택됐다.

※ 주요 내용 : 부패 예방, 부패 범죄화와 법집행, 국제협력, 자산회복, 기술지원과 정보교환, 지속가능개발 2030 달성을 위한 반부패, 미래지향적 반부패 의제 등

한국 대표로 참석한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우리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고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반부패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가 부패에 대한 사후 적발은 물론 사전 예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말했다. 특히 혈연·학연·지연 등의 연고관계를 극복하고 공공정책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정했음을 소개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대된 정부의 권한을 통제하기 위해 '청렴' 가치가 중요하다는, 공직자와 기업인, 미래세대를 위한 윤리교육을 강조했다.

국민권익위, 국제사회 및 주한 외국기업인 대상

청렴정책 적극 소통 매진

- 대내외 청렴 국가 이미지 개선으로
2022년 세계 20위권 청렴국가 도약 기대 -

(2021. 6. 22.,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반부패 총괄기관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 인식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반부패 정책 홍보와 소통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먼저 국제적 위상에 비해 저평가된 국가청렴도(CPI) 제고를 위해 국제투명성기구(TI), 베텔스만재단(BF) 등 세계 유수의 반부패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한국정부의 반부패 정책성적을 정기적으로 알려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인식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최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통한 한국정부의 혁신적 반부패 개혁 노력과 지난해 12월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해 한국의 청렴 리더십을 발휘한 제19차 국제반부패회의(IACC)의 주요 성과도 지속적으로 알리고 있다.

* 대상 : 국제기구, 외국상의, 재외공관, 외신기자 등 약 2,300명 대상 매월 이메일 발송

아울러 주한외국상의와 협업체 매년 한국 주재 외국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반부패정책 홍보 외에 기업 경영 애로사항 등도 청취하고 있다. 올해 3월부터는 외국기업들이 사업과정에서 겪는 각종 고충민원이나 불공정 문제 등을 국민권익위가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한 외국 기업 옴부즈만'을 발족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까지 미국, 영국, 유럽, 독일 등 주요국 상공회의소와 협업으로 소속 기업인들의 기업 규제 건의사항을 상담하고, 접수된 기업 고충민원도 해결중이며 호주, 캐나다 등 국가와의 기업인들과도 면담을 진행한다.

주한 외국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은 한국의 국가 이미지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이러한 국민권익위의 노력들이 국가청렴도 상승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최근 외국기업 민원 해결 사례**

코로나19 확산으로 최근 일부 국가에 대한 교육 및 산업분야 비자발급이 제한되고 있고 이에 대한 민원(21. 3. 30. 접수)에 대해, 국민권익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은 관계기관에 외국 기업인 등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부처 협의를 통해 외국 기업인 등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민원을 해결함(2021. 4. 19. 관련 지침 개선)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개선을 위해 그동안 국민권익위는 대내외 정책 소통에 매진했고, 그 결과 지난 4년간 우리나라 국가청렴도(CPI)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3월 발족한 국민권익위 ‘주한 외국기업 옴부즈만’을 통해 외국 기업인들의 고충민원 등을 해결하는 한편 반부패 정책 홍보도 강화하여 국가청렴도 세계 20위권 진입을 위한 기반을 확실히 마련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전국 17개 시도와 손잡고 ‘반부패·권익증진’ 총력전 펼친다

- 전현희 위원장, 80일간 전국 청렴 대장정 마무리 -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 17개 시도와 공직기강 확립, 국민고충
해결 위한 업무협력 체계 구축



(2021. 6. 21.,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세계 20위권 청렴 선진국 진입을 위해 지난 4월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 17개 시도와 ‘반부패·권익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80일 간의 청렴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국민권익위는 LH 사태와 같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등을 예방하기 위해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를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공직 사회의 청렴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협력 및 혁신 지원’ 과제는 10대 혁신과제 중 하나다.

올해 초 발표한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CPI)는 4년 연속 상승해 세계 180개 국가 중 33위를 기록했으며, 내년에는 세계 20위권으로의 청렴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는 최근 발생한 LH 사태로 인해 국가청렴도 하락 위기와 실추된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공직기강 확립과 범국가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보고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소속 공직자들의 반부패 협력 강화 및 혁신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권익위는 광역시도와의 업무협약 체결 후 단지 협약에만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재점검하고 실질적이고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각 기관과 반부패·권익보호를 위한 지침 정비, 청렴 컨설팅과 구체적 세부협력사업 등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17개 시도에 대해 우선적으로 내년 5월 시행예정인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각 기관의 반부패·청렴 시책 및 신고자보호제도 운영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각 기관의 청렴도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한 정책지원을 강화한다. 아울러, 각 시도의 교육훈련기관에 청렴교육과정을 필수적으로 반영토록 하여 소속 공직자에 대한 반부패 인식을 강화한다.

또한, 지역주민의 고충을 보다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각 시도에 시민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지원하고, 각 지역의 현안민원 및 집단민원에 대한 조정과 해결을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각 시도행정심판위원회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국민들의 권익침해도 더욱 신속하게 해결해 나간다.

국민권익위는 시·도와의 공동협력사항에 대해 패키지로 정책지원을 펼치는 한편, 업무협력 추진 실적과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빠른 시일 내에 [공직기강 쇄신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를 모두 완수할 수 있도록 이행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의 이행력을 담보하고, 각 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청렴도 평가제도를 새롭게 개편한다.

아울러, 지방의회 청렴수준 제고를 위한 반부패협력도 더욱 공고히 한다. 이번 광역시도와의 업무협약 체결 시 부산, 대전, 세종, 충남, 전남 5개 광역의회와는 반부패협약을 함께 체결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는 다른 광역의회와도 반부패 협약체결을 확대해 지방의회의원 대상 청렴교육을 확대하고, 이해충돌 취약분야에 대한 관리 및 겸직금지 등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준수를 위한 협력도 강화해나간다.

한편, 17개 시도의 청렴성 제고 노력이 공공기관에 확산될 수 있도록 주요 공기업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공기업 대상 윤리준법경영 인증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민간기업에까지 확대해 나간다. 이와함께 민간 부문의 '청렴 선물기준'을 마련하여 공직사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청렴'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국민권익위와 광역시도가 힘을 합쳐 부패 취약분야를 재점검하고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시책을 적극 추진함에 따라 LH사태로 촉발된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는 한편, 국정목표인 세계 20위권 청렴선진국 진입에도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아울러, 지역주민의 고충 해결 및 사회갈등 해결에도 협력체계가 공고히 구축됨에 따라 국민들의 권익을 보다 촘촘하게 보호하고, 국민에게 힘이 되는 적극행정을 펼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전국 광역지자체와의 반부패 업무협약 체결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정부의 반부패 혁신과 쇄신 의지를 국민께 약속드린 것”이라며, “앞으로 각 기관과 적극 협력해 공직사회의 청렴성·공정성을 높이고, 세계 20위권의 청렴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청렴도 체계 20년 만에 개편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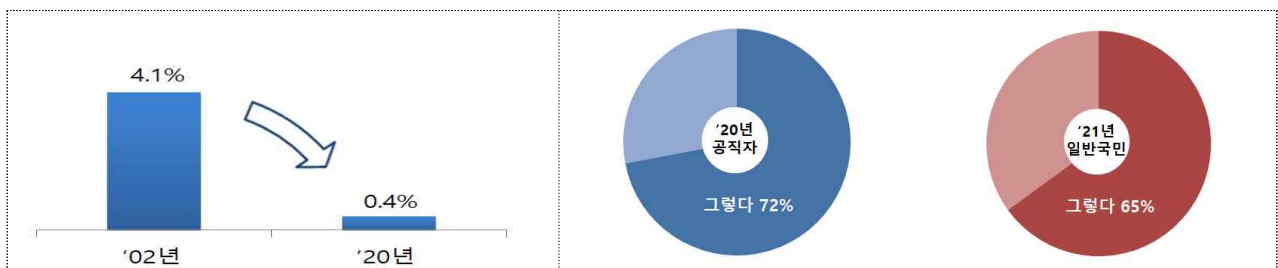
- 공공기관의 반부패 정책 추진을 이끌어 나갈
평가제도의 새 틀 짚다 -

(2021. 6. 18., 국민권익위)

청렴한 공직사회를 향한 새로운 청렴도 평가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LH 사태 등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올해 4월 수립한 반부패·청렴 혁신 10대 과제의 일환으로 청렴도 측정체계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2002년부터 청렴도 측정, 부패방지 시책평가라는 청렴 수준 평가제도를 운영하며 공직사회의 청렴도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국민들이 부패를 경험한 비율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었고, 대다수의 국민들과 공직자들이 청렴도 평가제도가 공직사회의 청렴성 향상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 공공기관 업무를 경험한 국민의 부패경험률 > < 청렴도 측정이 청렴성 향상에 기여했는지에 대한 응답 >

※ 청렴도 측정 결과, 한국리서치 자체조사 결과('21.4월) 등 참고

하지만 금품수수 등 전통적 부패 중심의 평가로는 달라진 행정환경과 국민 눈높이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등 다양하게 정비된 반부패 법·제도의 차질 없는 이행을 이끌어 나가는 평가제도가 될 수 있도록 그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필요성도 더욱 커졌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청렴도 평가제도의 한계를 보완해 국민과 공직자들이 두루 공감할 수 있는 평가제도 마련에 착수하고, 지난 3개월간 국민, 관계기관, 전문가, 시민단체 및 내부 직원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가 체감한 부패수준을 측정하는 청렴도와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통합하여 평가의 시너지 효과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갑질 등 새로운 부패유형에 대한 반영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내·외부 의견을 바탕으로 두 평가제도를 통합하여 공공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을 견인하고, 다양해진 부패유형을 반영하여 사각지대 없는 청렴수준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후 7월까지 국민권익위에서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하반기에는 공청회, 간담회 등 다각도의 의견수렴과 시험조사,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연말까지 구체적인 실시방안을 마련한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국민이 공감하고 실제 공직사회가 변화할 수 있는 청렴도 평가체계로 개편해 공직사회가 더욱 청렴해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며, “하반기 중 이뤄질 다양한 의견수렴에 국민과 공공기관 직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 윤리준법경영을 위한 중장기적 제도 마련 착수

- 인증 도입 등 제도 마련 위해 연구진 간담회 개최 -

(2021. 6. 14., 국민권익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 및 인증체제 도입 등 중장기적인 제도 마련에 착수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지난 6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 및 인증 도입 간담회’를 개최*해 연구진에게 윤리준법경영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체계적이고 면밀한 연구를 당부했다.

* 참석: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 임윤주 기획조정실장,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이천현 박사, 황지태 박사, 박학모 박사 등 9인

지난 1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20년 국가청렴도(CPI)는 33위로 2017년 대비 13단계 상승했으나, 기업 및 민간부문의 지표*는 4년간 답보 상태로 국정목표인 ‘2022년 국가청렴도 20위권대 달성’의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 ‘경영활동 관련 부패(IHS Markit)’ 59점, ‘공적자금 유용·계약 등 뇌물관행(EIU)’ 55점

국민권익위는 민간부문 투명성에 대한 낮은 국제적 평가와 최근 LH 등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의 재발방지를 위해 공기업 및 기업의 적극적인 윤리준법경영 실천을 유도할 예정이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를 통해 이번 연구를 맡게 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이천현 박사 등 연구진은 향후 ‘윤리준법경영 프로그램’ 개발, 윤리준법경영 우수 기관에 대한 인증 및 인센티브 제공방안 등을 연구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제도 마련에 앞서 지난 3월 전문가 TF를 구성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대국민 소통창구인 ‘국민생각함’ 설문조사를 활용해 6월 4일부터 13일까지 10일 간 국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또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현장에 맞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반기 중 공기업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운영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컨설팅, 실태조사, 인증 평가항목(안)에 따른 예비 심사 등을 실시한다.

* 시범운영 대상기관 신청 접수 : 6.14. ~ 6.18.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윤리준법경영은 현 시대에 아주 중요한 가치이나 우리사회에 완벽히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반부패 총괄기구인 국민권익위가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우수 기관에 대해 인증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를 통해 향후 국정 목표인 국가청렴도(CPI) 20위권대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